

보/도/자/료

-
- 날짜 : 2009년 2월 10일
 -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경기이주공동대책위
 - 문의 : ***** (**-**-****)
 - 제목 : 아직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년 추모 및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노동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아직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 및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노동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일시 : 2009년 2월 11일, 11시
- 행사장소 : 수원출입국 사무소 앞 (구운동)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2009년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로 많은 이주노동자분이 돌아가신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주노동자 분들이 폭력적인 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3. 2월 11일 전국 동시다발로 여수참사 추모와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추구를 위한 공동행동을 하는데 수원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4.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은 점점 못살고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으로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한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온 나라를 슬픔과 탄식에 젖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년 전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사건 직후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기는커녕 그해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부를 개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재발방지 대책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간 미봉책일 뿐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호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수참사 이후에도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계속되어 단속반에 쫓기던 중국교포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작년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당뇨병이 걸린 한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한 사실이 있고 최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벌어진 싸늘이 단속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길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하여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마치 외국인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모순을 보아야 한다. 철거민들이 쥐꼬리보다 못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철제망루에 올라야했듯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쥐꼬리만한 임금

라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를 각오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직장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비율을 5%대로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과연 내국인들로 채울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소위 3D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근로 상태인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할지라도 내국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값싼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정으로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주노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일할 만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올 한해도 굳건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2009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